

대외 무역 · 산업 협력방안

김 용 태*

1. 머리말

금년으로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GATT가 창설된지 50년이 되었다. 또한, GATT체제보다 더 실효성있는 틀을 갖춘 WTO도 발족 4년을 맞았다. 이와는 별도로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여 상호 혜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APEC·ASEM·OECD·기타 지역간 협정 등 경제협력체의 태동이나 기능강화도 활발하다. 이와 아울러,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 기술이전, 산업간 또는 기업간 제휴 등 외국과의 협력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협력활동으로 인해 국내정책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은 이미 고전적인 것이고, 최근에는 노동·환경·투자·경쟁정책까지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설정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외협력활동이나 국내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활동도 이러한 움직임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고 성장의 상당부분을 수출 등 외국과의 협력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라로서는 더욱 그렇다.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의 보호나 지원 없이도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견딜 수 있게 된 적자생존의 루울이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외 협력환경의 변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과 산업협력분야의 대외협력활동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변화되고 있는 대외협력 환경

우선,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무역자유화의 진전,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10년간 전세계의 무역은 경제성장보다 2배, 국제투자는 경제성장보다 3배나 빠른 비율로 증가하였고, 1950~1996년 사이에 전세계 제조업 생산은 9배 증가한데 비해 제조업 무역은 31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수출 의존 비중이 1975년 18.0%, 1990년 22.0%에서 2000년에는 25.3%로 증대될 전망이다. 기업활동의 범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는 주요인인 해외직접투자 역시 기업의 해외진출, M&A 확대 등으로 단순교역보다 빠른

* 산업자원부 협력총괄과 서기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3년에 2천억 달러인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005년에는 무역규모의 20%에 달하는 2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과 직접투자 규모의 확대에 의해 개별 국가의 경제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WTO체제가 점차 공고화되고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13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WTO는 신속하고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 나가고 있다. GATT체제하에서의 제소가 연평균 5건임에 비해 WTO 출범 이후는 연평균 3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WTO 기능의 유효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WTO는 이 밖에도 UR후속협상과 분야별 추가자유화를 위한 협상도 가속화 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간의 무관세화에 합의하였고, 203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정보기술협정의 타결에 이어 2단계 협정을 추진중에 있는 등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역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기존의 지역협력체의 확대와 함께 각 지역협정들간의 연계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U, MERCOSUR, NAFTA, AFTA의 확대 움직임과 함께 북미-유럽간, 남미-유럽간, 아시아-유럽간 등 대륙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APEC 내에서의 조기 자유화 논의도 진전되고 있는데 모두 15개 분야의 조기자유화 대상 중 1999년 이행을 목표로 환경제품 및 환경관련 서비스·에너지·완구·보석·의료장비·화학·통신·수산물·임산물 등 9개 분야를 우선자유화 대상으

로, 고무·비료 등 6개 분야를 후속검토분야로 선정하여 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자(多者)차원의 협력강화 움직임과 함께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에 입각한 쌍무적(雙務的)인 시장개방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개도국시장 개방요구와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는 선진국 기업에 의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소 또는 부과조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해야 할 상황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이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은 인도네시아, 홍콩, 우리나라로까지 확산되었고, 금년 8월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며, 중남미 경제 역시 동요하고 있다. 외환위기는 아니더라도 일본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도 그 동안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해 온 미국이나 EU경제권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교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WEFA 등 경제예측기관들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1997년 2.8%에서 금년에는 2.5%로, 개도국은 4.9%에서 2.9%로 낮아지고 교역증가율도 선진국은 8.6%에서 6.8%로, 개도국은 10.8%에서 7.4%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단시일내에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내적인 환경도 변하고 있다.

대외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감으로써 국제경제질서 유지에 동참하고 우리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정부는 IMF프로그램 이행을 계기로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미흡한 개방에서 비롯되었던 대외통상마찰 요인은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신정부의 개방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외국상품과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수용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무역 및 투자 자유화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54개 특별법상의 수입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수입선다변화제도를 1999년 6월말까지 완전폐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감면 등 인세티브제도를 확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 도박업·안보·문화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KOTRA에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Service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이러한 대외개방과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전문가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협력기금(EDCF)이 빈약하고, 각국과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예산도 미미하다. 또한, 정부나 민간부문에서의 국제업무 전문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경우, 전문가 양성제도가 불충분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국제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3. 대외 무역·산업 협력방안

대외 무역·산업협력은 세계경제와 대외협력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는 한편,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원활한 시장개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국의 수입규제움직임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화절하에 따른 일부 수출증증품목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현저해지고 있는 가운데, 1998년 들어서만도 미국·EU·중남미 등 10여개 국가가 스텐레스강선, 와이어로프, 타이어 등 21개 품목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종래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개도국까지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산업자원부는 중남미(98.4)·동남아(98.6)·미국(98.9)에 민관합동의 산업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고, 금년 내에 자동차·전자분야 등 사절단을 3~4차례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또, 정부·KOTRA·무역협회·업종별 단체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WTO 출범(95.1) 이후에 5년 이상 반

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 예를 들면, 미국의 칼라TV 등 14개 품목, EU의 전자저울 등 4개 품목에 대한 각국의 재검토(sunset review)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업계중심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자원부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투자장벽을 완화시켜 나가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KOTRA·무역협회·업종별 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외국의 불공정하고 시장왜곡적인 각종 제도·조치·관행 등 무역·투자장벽을 검토하여 총 61개국 267건에 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의 무역·투자장벽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정부관련부처는 물론 업계에서도 이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D/B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에는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애로신고체제도 갖추어 놓았다. (<http://www.kotra.or.kr/FTB/>) 정부는 사례집에 수록된 장벽들을 철폐 또는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각종 통상협력채널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교섭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세일즈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주되고 있는 플랜트·기자재·해외건설 등 대형프로젝트의 수주지원을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의 서한 발송, 발주기관 대표 초청, 재외공관장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신뢰와 수주능력을 알리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의 경제개발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 구매·국제입찰 등 해외에서 발주되는 대형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2차에 걸쳐 캐나다·태국·대만 등 11개국 자료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집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기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동포 상공인을 수출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동포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 L.A·뉴욕·시카고에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통상협력협의회」를 통해 수출진흥지원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최근의 부진한 수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별 수출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각 지역별로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액션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상무관이나 KOTRA 무역관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출증대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역별 수출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의 상무관이나 무역관과 연계하여 액션프로그램의 추진과 애로사항의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한-EU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타당성 검

토와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못지않게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요국에 외국인투자 유치단을 파견하여 기업간 투자상담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개선상황과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을 널리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 이미 미국(6.7-13)·EU(6.27-7.4)·싱가폴(8.25-27)·일본(10.6-10)에 파견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외국의 투자환경조사단 유치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만·일본·벨기에·영국·프랑스·싱가폴·홍콩·독일·스웨덴 조사단의 방한에 이어 EU·미국·캐나다 조사단도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도 구축하였다. KOTRA에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크게 보완하였고, 「외국인투자 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공장 설립에서 사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 동안 투자유치활동과정에서 파악한 외국인 투자가를 D/B로 구축하여 관심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주요국과 산업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제의 대외의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간의 산업구조나 기술수준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자국의 산업기반이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인적 교류·제3국 공동 진출·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미 미국·일본·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 12개국과 정부레벨의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에 민간기업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민간이 공동 참여한 「한미 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벤처중소기업협력·자동차·통신·환경·정부조달·Korea-U.S Biz-Net·전자상거래·영화 등 8대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기업협력재단」을 지난 4월에 설립하여 한미 산업기술협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일본과는 지금까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는 협력사업을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일간 협력유망한 부품이나 소재분야를 양국의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선정한 후 양국 업계에 홍보, 대일 수출기회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2년 월드컵축구 공동개최를 앞두고 양국의 새로운 협력분위기를 제고하고 협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와 경제·학술·문화·스포츠 등 각종 행사를 포괄하는 「한일산업문화교류제 21」을 2000년부터 3년간 한일 양국이 번갈아 개최기로 하였다.

중국과는 1994년 3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설치한 「한중산업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HDTV·자동차부

품 등 4개 우선협력 분야 외에 화학공업·자원·발전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U와는 우리 기업의 EU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EU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협력채널과는 별도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50여개 국가와 민간경제단체간에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레벨의 산업협력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무역과 투자상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4. 우리 기업의 대응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시대’, ‘무한경쟁 시대’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만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부단한 변신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외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앞으로의 시장은 전세계이며, 경쟁상대는 전세계의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걸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

응체제를 갖추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업계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역마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종 업계간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 무역마찰이 있거나 외국의 기업과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외 세일즈용 회사 소개자료에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경우 답변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국제화업무를 다루는 인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적자원의 확보는 바로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비용이나 인력 등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KOTRA·업종별 단체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해외 개척단 파견이나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알리고 상품을 선전하는 유익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쓰라린 아픔을 견디며 제2도약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의 살길을 대외협력을 통해 상당부분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다. 산업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바를 찾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